

초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폐지” 결정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폐지 철회 및 존치 촉구 성명서 발표 및 찬동요청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폐지 결정을 철회하라! -

도서관인 여러분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서관은 연간 3억7천만여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문화, 교육 중추기관입니다.

이와 같은 도서관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여야 의원님들의 합의로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도서관법」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행복한 삶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숭고한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 보지도 못하고, 설치 7개월만에 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지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협회 등 20개 기관대표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폐지가 불합리함을 알리는 “성명서”를 별첨과 같이 작성하여 관계요로(關係要路)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인여러분들께서도 ‘성명서’를 읽어보시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폐지의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 숙고해주시기를 바라며, 이 취지에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들께서 뜻을 같이 하신다면, 우리협회 홈페이지 [커뮤니티] → [회원 공간] → 성명서글의 “한줄 답변”에 동위원회의 존치를 바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인 전체가 하나로 뭉쳐 큰 힘을 만들어 주시고 이를 토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갖아주시기 바랍니다.

2008. 1. 21.

한국도서관협회 등 21개 기관 대표 배상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존치를 위한 도서관계 활동내용

2008년 1월 16일(수) 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작은 정부”, “실용정부”를 내세우며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지금의 정부조직을 축소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새로운 대통령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발표를 기대에 가득차 기다렸던 우리 도서관인들 앞에 발표내용은 단순히 ‘실망스럽다’ 라는 표현을 뛰어 넘는 일이었다. 인수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들의 폐지를 거론하면서 지난 2007년 6월 발족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폐지를 결정하였으며, 그 이유를 “실효성 부재”라고 요약하였다.

그간 향후 새로운 정부에게 지향해야할 도서관정책에 대한 제안자료를 준비하고, 이 자료를 보내려고 준비중에 있었던 우리협회로서는 그야말로 당혹스럽기 그지 없었다.

1월 18일(금) 오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존치」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가 우리협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은철 협회 부회장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회의 결과, 협회가 대표가 되어 산하협의회와 기타 유관단체들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성명서에는 위원회의 설치경과, 설치이유, 존치 타당성 설명 등을 자세히 제시하고, 인수위원회에 정보정책위원회 폐지 결정에 대한 사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성명서는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와 도서관메일링리스트에 동시에 발표하고, 이 두 곳에서 온라인 서명을 댓글로 받기로 하였다(이후 사서 e-마을 홈페이지 게시판으로도 이 내용이 게시되었다). 성명서는 초안과 개정작업, 협의회 및 유관기관들의 성명서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쳐 1월 22일(화) 우리협회와 도메리에 게시되었으며, 우리 협회 포함 총 21개 단체가 이 성명서에 동참의사를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협회에서는 이 성명서를 국회의원 294명 전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으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에게도 성명서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송부하였다.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의 “국민정책제안” 게시판, 문화관광부 노조 홈페이지 등에도 이 내용을 게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부 혁신인사기획팀에 공문을 보내어 도서관계의 성명서 발표사실을 알렸다.

1월 23일(수), 우리협회의 김태승 회장과 이은철 부회장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한상완 위원장 등과 함께 국회 15개 의원실을 방문하여, 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한 「도서관법」 개정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상임위에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존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우리협회 명예회장인 신기남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A4 4면에

걸친 서신을 통하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존치를 위하여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보태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 및 위원회 폐지 발표 이후, 정치권에서는 조직개편의 정당성에 대해 쉽게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에 대해서 여야 간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혼선을 거듭하고 있었다.

우리협회에서는 1월 25일(금), 48개 방송·통신·신문사 담당기자 60여명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 내용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존치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우리 도서관계의 성명서와,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도서관정책에 대한 제안(본지 41~57면)을 담고 있었다. 이후 이 보도자료는 내일신문, 뉴시스 등에서 토막기사로 다루어졌으나, 우리 도서관계가 60년 역사 속에 간신히 이루어낸 위원회의 미래에 관심을 갖고 지지를 얻기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언론의 호응도 미미하였다.

그러나 우리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도서관인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협회 홈페이지, 도서관메일링리스트, 사서 e-마을, 그리고 인수위원회의 게시판 등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폐지를 반대하고 존치를 촉구하는 글을 끊임없이 남기며 서로를 독려했다.

지난 2월 10일(일), 정치권이 6자 회담을 열어, 정부조직개편 대타협을 시도하는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성명서를 내고 문화관련 기관 개편에 대한 인수위 방침에 강하게 항의하였다. 통합신당 문광위 소속 강혜숙·정청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도서관정책을 도맡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은 반(反) 문화적인 조직편제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7개월 전에 격론없이 한나라당과 합의한 법에 의해 만들어진 위원회로, 위원회 폐지라는 ‘쓰나미’ 조치에 따라 도서관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폐지하는 게 이명박 당선인이 말하는 인재 강국과 무슨 관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온 몸으로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런 법들이 문광위 법안소위에 넘어와 있는데, 철저하게 따지고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폐지결정에 대하여, 우리협회를 비롯한 도서관계의 성명서 발표와 회장단의 국회 방문 등 위원회 존치를 위한 노력과, 도서관인들이 적극적인 동참 등 그 동안의 노력이 가시화되는 한 순간이었다.

이후 우리협회는 공식 비공식 채널을 모두 동원하여 정부조직개편안을 다룬 국회의 6인 협상단에서 위원회의 존치가 합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여야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끊임없는 공방전이 새로운 정부의 탄생에도 좋지 않은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불안감은 계속되었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존폐는 여야

의 일괄타결에 따른 협상결과 발표 방침에 따라 쉽게 그 존치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2월 20일(수) 드디어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12조에 이르는 합의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마지막 조항인 “12.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19개 위원회 문제는 양당 원내 대표가 협의하여 처리한다”에서 위원회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의 협의사항이 되었다.

결국 협상 결과와 대타협의 반전 속에 최종 마무리는 양당 대표에게 맡겨지자 합의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위원회는 그 소속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고 기사화되기도 하였다. 이에 우리협회 신기남 명예회장은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양당의 대표를 만나 처음 합의대로 위원회를 대통령소속으로 존치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며, 다시 한번 인재강국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새정부에 대해 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위원회 문제를 재각인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존폐라는 큰 물결속에서 단지 하나의 위원회로 밖에 인식되지 못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대해 양당대표의 합의와 인식 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었다. 신기남 명예회장은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국회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 양당 원내대표, 간사 등을 만나 다시 한번 관계자들에게 합의대로 할 것을 부탁하고 종용하기에 이르렀고, 이 끈질긴 설득의 결과 제17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던 2월 25일(월) 우리협회는 드디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존치시키는 것이 최종 확정되었음을 회원을 비롯한 전 도서관인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도서관인들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대통령소속의 위원회로 지켜냈다. 솔한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위원회를 지켜낸 것은 도서관인의 적극적인 성원과 신기남 한국도서관협회 명예회장을 비롯한 도서관계 인사가 보여 준 각고의 노력이 맺은 성과이다. 위원회 존치 성명서(한도협, 도메리, 사서e마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에 보여준 7,000여회의 조회와 700여개의 댓글, 그리고 인수위 홈페이지에 남겨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존치에 대한 80여건의 글과 수많은 댓글은 도서관계 역사에 남을 큰 호응이 아닐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도서관인의 조용하지만 끈질긴 전방위적 노력과 성원이 이 같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하고 자축코자 한다.

이제 우리는 재탄생한 위원회가 진정한 도서관 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인프라가 되어왔던 우리 도서관인들이 이제는 역동적인 활동으로 인재강국을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줄 때이다.

[정리 : 김태경 회원협력팀장]

- 1월 16일(수)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등 폐지 발표
- 1월 18일(금)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존치」대책 회의
 - 일시 : 2008년 1월 18일(금) 15:00~17:30
 - 장소 : 협회 사무국 회의실
 - 참석자 : 광동철 교수, 이용남 교수, 이은철 부회장, 정동열 교수(가나다순)
한상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선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정책
조정 팀장
이경구 사무총장, 이현주 부장, 이용훈 부장, 김태경 팀장
- [결정내용]
 - 성명서 발표 결정
 - 성명서 포함 내용
 - 설치경과, 설치이유, 존치 타당성 설명
 - 위원회 폐지 결정에 대한 사유제시 요구
 - 성명서 참가단체
 - 산하 협의회 협조 요청
 - 유관단체 성명서 동참 요청
 - 성명서 발표 방법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메일링 리스트 활용
 - 두 곳에서 온라인 서명을 댓글로 받도록 함.
 - 국회 및 관련 인사 접촉
 - 국회의원 접촉 : 문광위, 행자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등
- 1월 19일(토) 성명서 초안작성 및 검토
- 1월 21일(월)
 - 성명서 내용 확정
 - 도서관계 주요단체의 동참의사 확인 : 협회 포함 총 21개 단체
 - 협의회 및 유관단체(12개 단체)
 -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학교
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학교도서관정책포럼, 한국기록관리협회, 한국대학도서
관련협회,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한국신학
도서관협의회,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 학계(8개 단체)
 - 서지학회, 전국전문대학문헌정보교육협의회,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한국
기록관리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한
국정보관리학회

- 국회의원에게 성명서 발송 : 전체 294명 대상 전원 발송(FAX)
- 「도서관법 일부 개정 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100)
 - 모두 13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
- 1월 22일(화)
 - 도서관메일링리스트,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성명서 공고
 - 온라인 서명을 댓글로 받기 시작
 - 정부 기관 홈페이지에 성명서 및 관련 자료게시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 성명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성과자료
 - 문화관광부 노조 홈페이지 : 성명서
 - 정부기관에 도서관계의 성명서 발표 사실을 알림
 - 문화부 혁신인사기획팀 : 공문, 성명서
 - 국회문광위 전문위원에게 성명서 발송(FAX)
 - 전문위원, 수석위원실, 행정실 등 : 성명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성과자료
- 1월 22일(수)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긴급 회의
 - 일시 : 1월 22일(수) 14:00~17:00
 - 장소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회의실
 - 참석자 : 한상완 위원장, 김태승 위원, 이용남 위원, 서진원 위원, 홍은희 위원
- 1월 23일(목)
 - 국회방문 : 윤원호 의원실 등 15개 의원실
 - 일시 : 1월 23일(목) 13:00~16:00
 - 방문자 : 김태승 회장, 이은철 부회장(이상 우리협회)
한상완 위원장, 이용남 위원(이상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이선 팀장, 정진호 사무관(이상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정책조정팀)
 - 내용 : 「도서관법」 개정의 부당성 설명 및 상임위에서 저지 촉구
- 1월 24일(목)
 - 정청래 국회의원 방문 면담
 - 일시 : 1월 24일(목) 16:30~17:30
 - 장소 : 정청래 의원 지역구 사무실(마포구 합정동)
 - 참석자 : 정청래의원, 한상완 위원장, 이선 팀장, 정진호 사무관, 의원 보좌관
 - 내용 : 「도서관법」 개정 부당성 설명, 상임위에서 부결 주장

■ 신기남 명예회장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존속되어야 합니다”(본지 34~36면에 전문게재)

- 17대 국회의원 전원

- 내용: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중요성 강조, 폐지 반대와 존치를 위한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

□ 1월 25일(금)

■ 우리협회 : 보도자료 배포

- 보도자료 배포대상 : 48개 방송 · 통신 · 신문사 담당기자 60명

- 내용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존치를 강력히 희망한다”

도서관은 연간 3억 7천만여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문화, 교육 중추기관입니다.

이와 같은 도서관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여야 의원들의 합의하에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도서관법」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행복한 삶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숭고한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보지도 못하고, 설치 7개월만에 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지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협회 등 21개 기관대표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폐지가 불합리함을 알리는 “성명서”(자료: 새정부 출범에 따른 도서관 · 정보정책 제안서)를 작성하여 탄원합니다.

위원회 폐지의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 숙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위원회가 존치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 1. 25.

한국도서관협회 등 21개 기관 대표 배상

- 첨부자료 : 성명서 1부, 새정부 출범에 따른 도서관 · 정보정책 제안서 1부

□ 언론 보도내용(기사 및 기고) 정리

[기고]

- 1월 30일(수), 「서울신문」 도서관정보정책의 실종을 우려한다
/ 윤희윤(대구대학교 교수, 한국문헌정보학회 부회장), (본지 39~40면에 전문게재)
- 2월 18일(월), 「한국독서교육신문」 도서관위원회의 존폐와 대통령의 리더십
/ 백원근(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 2월 19일(화), 「한겨레신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두는게 효율이다
/ 이용남(한성대학교 전총장,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본지 37~38면에 전문게재)
- 2008년 3월, (월간) 「책과 인생」 새 정부에 바라는 도서관 정책
/ 이용훈(우리협회 사업진흥부장)

[기사]

- 1월 24일(목), 「오마이뉴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시작도 못하고 폐지될 판
/ 문동섭기자
- 1월 25일(금), 「민중의 소리」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 존속돼야 / 김정환기자
- 1월 26일(토), 「뉴스스」 도서관협회, 도서관정보정책위 존치해야 / 윤근영 기자
- 1월 30일(수), 「내일신문」 'OECD 최하위' 도서관 진흥책 절실 / 오승완 기자
- 2월 10일(일), 「inews 24」 강혜숙, 정청래 의원 국회브리핑, 박물관 통폐합, 도서관위원회 폐지반대 / 김현아 기자

□ 우리협회의 도서관메일링리스트를 통한 관련 소식 게재 및 도서관인들의 호응 독려 활동

- [글번호 18224] 1월 23일 [성명서 찬동요청]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폐지철회 및 존치 촉구 성명서
- [글번호 18259] 2월 11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존치노력에 국회의원 힘 보태 (본지 31면)
- [글번호 18265] 2월 13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존치 지지 정책제안을 합시다 (본지 32면)
- [글번호 18279] 2월 25일 우리힘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지켜냈습니다 (본지 33 면)

□ 성명서 조회 및 댓글 참여 통계(1월 22일~2월 25일)

: 총 6,968건의 성명서 조회와 731건의 댓글을 통한 온라인 서명 참여

	성명서 조회	댓글참여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	2059	122
도서관메일링리스트	1624	113
사서 e마을	3285	496
계	6968	731

도서관메일링리스트 게시물[글번호 : 18259/2008년 2월 11일(월)]

제 목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존치노력에 국회의원 힘 보태

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폐지결정에 대하여, 우리 협회를 비롯한 도서관계의 성명서 발표와 국회 방문 등 위원회 존치를 위한 노력과, 도서관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 등 그 동안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정치권이 6자 회담을 열고, 정부조직개편 대타협을 시도하는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성명서를 내고 문화관련 기관 개편에 대한 인수위 방침에 강하게 항의하였습니다.

통합신당 문광위 소속 강혜숙·정청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도서관정책을 도맡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은 반(反) 문화적인 조직편제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도서관 정책위원회는 7개월 전에 격론없이 한나라당과 합의한 법에 의해 만들어진 위원회로, 위원회 폐지라는 ‘쓰나미’ 조치에 따라 도서관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폐지하는 게 이명박 당선인이 말하는 인재 강국과 무슨 관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온 몸으로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런 법들이 문광위 법안소위에 넘어와 있는데, 철저하게 따지고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성명서 발표에는 조배숙, 정청래, 강혜숙, 김재윤, 김형주, 김희선, 이상호, 유선호, 윤원호, 이광철, 전병현, 지병문 의원 등 통합신당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협회는 인수위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폐지관련사안에 대하여 예의주시하면서 존치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오니, 도서관인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으로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기사:

“박물관 통폐합·도서관위원회 폐지 반대”...통합신당 문광위원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12017&g_menu=020900

<2008년 2월 10일 오후 14:59 입력>

도서관메일링리스트 게시물[글번호 : 18265/2008년 2월 13일(수)]

제 목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존치 지지 정책제안을 합시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존치 지지 정책제안을 합시다.

도서관인 여러분!

지난번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폐지 철회 및 존치 촉구 성명서」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으로 국회의원들의 위원회 존치 성명서를 끌어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존치여부 결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느낌입니다. 바로 이때 위원회의 존치를 위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즉시 인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17insu.or.kr>)의 [국민성공정책제안]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존치를 지지하는 글을 올립니다. 글의 내용과 수치가 위원회 존치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책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존치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이경구

도서관매일링리스트 게시물[글번호 : 18279/2008년 2월 25일(월)]

제 목 : 우리 힘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지켜냈습니다.

회원 여러분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완전무결하게 지켜냈습니다. 아울러 기획단도 2과1팀으로 거의 손상없이 유지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위원회를 지켜낸 데에는 도서관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신기남 한국도서관협회 명예회장을 비롯한 여러 인사가 보여 준 각고의 노력이 맺은 성과입니다. 위원회 존치 성명서(한도협, 도메리, 사서e마을 홈페이지에 게재)에 보여준 7,000여회의 조회와 700여개의 댓글은 도서관 역사에 남을 큰 호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경과는 이랬습니다.

인수위원회의 폐지 발표 이후 협회는 21개 관련단체의 협조를 얻어 존치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모든 국회의원과 인수위원회에 보내는 한편, 김태승 회장과 이은철 부회장 등이 국회를 방문, 여러 의원들에게 존치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이용남 교수(한겨레신문), 윤희운 교수(서울신문)의 기고문을 게재하고, 신기남 명예회장의 존치 성명서, 국회 문화관광부 소속 의원들의 존치 지지 성명들이 줄을 이은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다룬 국회의 6인 협상단에서 위원회 존치가 합의되었으나, 이후 협상 결렬과 대타협의 반전 속에 최종 마무리는 두 당 대표에게 맡겨지자 합의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소속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고 기사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신기남 명예회장은 당 대표 등 관계자에게 합의대로 할 것을 부탁하고 종용하여 드디어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최종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탄생한 위원회가 진정한 도서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도서관인의 조용하지만 끈질긴 전방위적 노력과 성원이 이 같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하고 자축코자 합니다.

2008. 2. 25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김 태 승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존속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신기남

의원님들께서도 각자 이번 17대 국회를 두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평가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두가지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16대부터 노력해온 ‘한글날’을 국경일로 만든 것이었고, 또 하나는 대통령산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글날을 국경일로 만드는 것’은 우리민족의 정수인 한글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10년이 넘는 한글학계와 한글단체의 소망이었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탄생’은 문화와 정보의 중심인 도서관의 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도서관계의 60년 묵은 숙원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17대 국회가 이러한 수십년에 걸친 숙원을 해결했다는데 그 일원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당리당락을 넘어 국가를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준 여야의 모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를 보고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위원회’를 정비한다는 이유로 17대 국회의 큰 성과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폐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많은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기에 조정하고 정비하는 것에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에는 ‘옥석을 가릴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하고,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도서관 정책은 문화부, 교육부, 행자부 등 10여개 부처에 분산되어 정책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은 물론이고 관련부처간의 협력이 어려워 우리 도서관의 발전은 더딜 수 밖에 없었으며, 결국 선진국의 도서관을 보며 마냥 부러워하는 게 그동안의 전부였습니다.

그러했기에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산하에 기구를 두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조정과 집행을 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누누이 있었습니다. 결국 기나긴 논의를 거치고 여야간의 합의에 의해 2006년 10월 「도서관법」을 개정했고, 지난해 6월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대통령 산하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우리는 여기저기 흩어져 효율성이 떨어지던 도서관정책을 서로 조율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차원의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도서관정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도서관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서 새정부가 강조하는 ‘효율성’에 비추어봐도 올바른 방향이며, 오히려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서관은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서 기능을 담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많은 선진국들은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도서관과 장서들을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게이츠도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시골의 작은 공공도서관’이라는 유명한 말과 함께 1997년 ‘도서관재단’을 만들어 도서관에만 수억달러를 기부하고 있으며, ‘강철왕’ 카네기도 1890년과 1917년 사이에 4천만달러, 현재 가치로 따지자면 5억달러가 넘는 큰돈을 도서관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도서관에 대한 투자는 미국이나 기업뿐만 아닙니다. 교육경쟁력과 국가경쟁력에서 1위를 하는 핀란드는 다른 무엇보다 ‘도서관 강국’입니다. 지난 2002년 방한한 리포넨 총리는 ‘공공도서관 사용인구 비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할 정도이며, 도서관이나 장서의 수도 우리나라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히 높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도서관을 통한 독서교육을 위해 아예 하루씩 도서관에서 묵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같은 선진국의 예는 수없이 많으며, 이는 도서관이야말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일 가장 좋은 투자차이며, 창조적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최상의 동력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공도서관의 수는 OECD국가 중 최하위이며, 도서관 관련 예산도 2004년기준 134억원으로 미국에서 한 대학이 사용하는 연간 도서 구입비보다 적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열악한 도서관 수준에 대해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탄생’은 정말로 가뭄에 내리는 단비로 여겨질 만큼 도서관 발전의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많은 도서관인과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야말로 선진국형 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기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1970년 대통령직속 상설기관으로 설치된 ‘국가문헌정보학위원회(NCLIS)’를 통해 국가차원의 도서관발전을 이끌었고, 영국이 ‘도서관정책위원회’로 각급정부기관의 도

* 한국은 총 인구 4,899만여명 중 17만 4천여명이 564개의 공공도서관을 이용, 1개의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가 8만 6,865명(2006년기준)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이며, 1위인 스페인 8,040명(2002년)의 10.6배, 독일의 9,497명(2002년)의 9.6배, 핀란드 1만 1,998(2002년)의 7.3배에 가까운 정도로 공공도서관의 수가 부족하며, 장서수도 4,924만여권으로 1인당 장서수가 1.01권에 그쳐 핀란드 7.24권(2002년)에 비해 7분의 1, 덴마크 4.98권의 5분의 1, 미국 3.0권(2004년)의 3분의 1가량에 불과함.

서관 관련 사항을 권고하고 자문하며, 다양한 도서관정보시스템을 조정하는 사례를 본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탄생한 후, 외국의 학계나 도서관계도 이를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했으며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것을 지금 우리는 걷어차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탄생한지 겨우 7개월여 만에 그 싹을 밟아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도서관발전의 전부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열악한 도서관 현실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효과적이며 필요한 조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이 창의적 지식인이 필요한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최근 급격한 성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중국도 이미 도서관에 집중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2006년까지 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까지 도서관 확충을 전개해 지금까지 6만 6천관, 장서수로 220만권에 이르렀다고 하며, 중국정부의 한 간부는 2007년에는 도시지역에 6천관 농촌지역에 3만에서 5만관을 설치해 2010년까지 농촌 지역에 20만개의 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이라 발표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미래에 대한 투자’ 소식은 우리를 더욱 긴장하게 하고, 기존의 ‘도서관위원회’까지 없애는 우리의 현실이 가슴 아프고 답답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위원회가 난무했다고 해서 옥석을 가리지 않고 폐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발전도 아닐 것입니다. 연간 이용자 수가 3억 7천만여명에 달하고 국민의 교육과 문화의 중추기관인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어떤 길이 현명한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새정부를 준비하는 인수위원회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폐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현명한 재고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님의 해안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올바른지를 살펴, 도서관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발전과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심어놓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라는 싹이 제대로 퍼보지도 못하고 말라죽게 버려두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은 2008년 1월 24일(목), 신기남 명예회장이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존치가 꼭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서신 내용입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두는게 효율이다

이 용 남

(한성대학교 교수 · 전 총장)

2천년대 이후 우리 도서관계에는 의미있는 변화가 몇가지 있었다. 첫째는 어린이들 대상의 책임기와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오랜동안 힘을 기울여 준비해온 72차 세계 도서관정보대회가 2006년 서울에서 역사상 최대규모로 개최되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적 여건의 성숙을 바탕으로 하여 2006년 10월 국회에서 도서관법을 전면개정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두게 되었다는 점 등이다.

그런데 최근 새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를 보고 좌절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정부 내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위원회를 정비한다는 명분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폐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무분별한 위원회를 조정하는 것에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그러나 그러한 판단에는 개개 위원회의 성격과 성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 절대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의 도서관 정책은 문화부, 교육부, 행자부 등 10여개 부처에 분산되어 부처간의 정책조정 기능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관련부처 간의 협력이 부족했기에 우리 도서관의 발전은 더디고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 위원회를 두고 효과적인 정책 조정과 조율을 해야한다는 뜻에서 10여년간 주무부 장관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운영해 보았으나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였다. 결국은 미국처럼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만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학계의 절기찬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2006년 여야 간의 합의로 법을 개정하고 2007년 6월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발족되었던 것이다. 미국은 1970년부터 대통령직속 상설기관으로 ‘국가 문헌정보학위원회(NCLIS)’를 설치하여 정부 각 부처의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시책을 조율하며 국가차원의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였고, 영국의 ‘도서관정책위원회’는 각급 정부기관의 도서관 관련 사항에 대해 권고, 자문하며 다양한 도서관정보시스템을 조정하고 있는 사례 등을 본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출범으로서 도서관계와 문화계는 수십년간 줄기차게 외쳐온 숙원이 이루어져, 선진국형 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이 위원회는 출범 후 불과 7개월 밖에 안되었음에도 각 정부 부처에 흠어져 있는 도서관관련 시책을 조정·종합하여 국가차원의 일관성 있는 도서관정책을 마련하는 등 도서관 발전의 터닦기 작업에 몰두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산하의 여러 위원회를 정비하면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실효성 부재'라는 단 한마디의 이유로 폐지한다는 결정은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도서관 발전에 대한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트린 셈이다. 위원회의 성과나 문제점에 대해 납득할만한 어떠한 분석 자료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 후 7개월 짜리 위원회까지 무조건 일괄 폐지한다는 결정은 인수위원회의 책임있는 조치라고 믿기 어려우며, 새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의구심을 갖게 할 우려가 크다.

물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만이 도서관발전의 전부라고 강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식 기반 사회에서 국민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정부 각 부처의 도서관시책을 최소한의 경비나 조직으로 효율화시킬 수 있는 기구는 바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다. 위원회가 많다고 해서 옥석을 가리지 않고 폐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고 들끓는 도서관계와 문화계의 여론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교육·문화 중추기관인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이 위원회는 존속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새정부를 준비하는 인수위원회는 물론 관련 법률을 심의하게 될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폐지'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2008년 2월 19일자 한겨레신문 33면에 게재되었던 글로, 필자와 신문사의 허락하에 전문을 수록합니다.

도서관 정보정책의 실종을 우려한다

윤 희 윤

(대구대학교 교수 · 한국문헌정보학회 부회장)

한 나라의 경제와 문화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을 견인하는 수레바퀴이다. 경제발전이 국가경쟁력과 물질적 풍요를 보증한다면 문화는 인간다운 삶과 정신적 성숙과 직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 공공부문 개혁과 정부조직 개편, 해외투자 유치 및 국내투자 활성화, 교육개혁, 부동산 안정화, 부패척결, 청년실업 해소, 보육 및 노인 복지 대책’을 국정운영의 8대 어젠다로 설정하였다. 요컨대 개혁부문을 제외하면 ‘경제 살리기’에 집중되어 있다.

새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려면 문화적 역량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 요체가 도서관 중심의 지식정보정책이기 때문에 지난해 6월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발족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하여 왔다. 그런데 인수위원회는 발족한 지 7개월에 불과한 도서관정보정책 위원회를 ‘실효성 부재’라는 이유를 들어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이 1970년 「공법 91-345」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의 정책자문기구로 설치한 국가도서관정보학위원회(NCLIS)를 여전히 존속시키고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

다른 위원회와 달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는 정치적 지형과 색깔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요 선진국의 도서관 및 문화계가 가장 부러워하고 주목하는 위원회이다.

그동안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제도 연구, 표준업무 및 운영절차의 마련, 도서관 사례평가, 법령개정과 정비 등에 몰두하여 왔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

첫째, 부존자원이 절대 부족한 한국은 지식기반의 경제와 사회를 구현해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대다수 선진국은 도서관이 자국의 문화수준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지식사회를 선도할 거점으로 판단하여 인프라 확충과 발전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가 주도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1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인프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처해 있다.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도서관 진흥이 지식문화수준의 향상과 직결된다는 공리를 외면하였기 때문이다.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를 존속시켜 경제력과 문화력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도서관은 한국의 문화기반시설을 대표하며 지식문화수준을 평가하는 최적의 대용 지표이다. 유네스코,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럽연합 등이 문화수준을 측정할 때 도서관당 봉사대상인구, 국민 1인당 장서수와 이용책수 등을 지표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를 통하여 도서관 지표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식문화의 후진성을 극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공공도서관 행정체계는 문화선진국과 달리,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정책기능은 문화관광부가, 감독기능은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일선의 관할 및 운영주체는 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러한 소모성 행정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 및 분권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혁신하려면 거중조정 기능을 수행할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 이 글은 2008년 1월 30일자 서울신문 30면에 게재되었던 글로, 필자와 신문사의 허락하에 전문을 수록합니다.

[자료]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 제안

※ 이 자료는 우리협회에서 새로운 정부의 도서관·정보정책에 대한 방향설정에 참고토록 제안하고자 준비하였던 것이었으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폐지 발표 이후, 위원회 존치를 위한 활동 중 신문·방송·통신사 등에 보도자료로 성명서와 함께 배포한 것입니다.

제안 사유

- 지식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도서관 역할 및 중요성 증가
 - 지식기반사회 국가 지식인프라의 원천으로서의 도서관의 육성 필요

- 도서관서비스 수준과 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 상승
 - 사회통합 및 교육·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국민의 평생학습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역할 확장

- 정보화시대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 필요성 증대
 - 국가지식정보의 핵심기반으로 도서관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효율적 수립과 집행을 수행할 통합적인 정책단위가 필요

- 정보불평등 및 지식정보격차 완화를 위한 도서관 기능 강화
 - 관중과 지역을 통합하는 도서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격차완화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제공

- 도서관정책 집행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진흥 강화에 따른 중앙·지방간 협력체계(Governance) 구축을 통한 도서관정책의 연계 강화

- OECD 가입국 중 가장 초라한 도서관 수준의 선진화 필요성 대두
 - 선진국과의 국가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통한 전국민의 지적수준 향상을 제고

도서관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 현황
 - 도서관 관련 기본법으로 도서관법(법률 제 8029호)이 2006년 10월 4일 의원 입법으로 전부개정 공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음.

- 도서관법 제12조, 제13조에 의거하여, 도서관정책 업무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실행기구인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 담당하고 있음.
- 도서관은 관종별로 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으로 구분되어지나,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42%를 포함한 전체 도서관의 90% 이상을 교육인적자원부-지역교육청이 관장하고 있음.
- 나머지 공공도서관의 58%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고 있고 전문도서관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여타 행정부처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화관광부에서 따로 관장하고 있음.

□ 분석

-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도서관설립 주체에 따른 관장하는 행정부처가 다원화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도서관정책 수행에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임.
- 공공도서관 일부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식정보기반과, 평생학습정책과 등에서 도서관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나, 직원 1~2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에는 도서관정책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도서관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도서관의 종합적인 정책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입안되고 있으나,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따로 교육인적자원부-지역교육청에서 정책발표를 하는 등 도서관정책 입안과 기능 수행이 분산되고 있으며, 전문도서관에 대한 정책기능 또한 관장하고 있는 행정부처의 입맛에 맞게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개선방안

- 연간 우리나라 국민 약 3억7천만명이 이용하는 문화, 교육 중추기관인 도서관을 OECD 가입국가 또는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대명제하에,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존치(存置)는 물론 도서관정책에 관한 수립·심의·조정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실행기구) 확대 및 예산확보가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함.

※ 미국의 경우 1970년 상설 독립기구인 국가도서관정보학위원회/The U.S.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 Information Science 라는 조직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여 국가도서관 및 정보정책과 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하여 백악관 및 의회에 직접 보고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연계·하부조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지정 및 설립과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침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고 일사분란하게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지역대표도서관: 지방 시·도 단위의 도서관정책을 집행하는 실질적인 행정기구
 -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지방 시·도 단위의 도서관정책 심의기구
- 교육인적자원부-지역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등 11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도서관정책의 계획 및 수행기능을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하여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혼란스러움과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발전적인 도서관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공공도서관

□ 현황

- 2006년 12월 현재 공공도서관은 총 564개 관이 설치·운영 중으로 국민 8만 7천여 명당 1관 수준임.
1 도서관당 인구수가 스페인의 경우 8,040명으로 우리나라의 10분의 1보다도 적은 인구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터키조차도 1도서관당 인구수가 46,236명으로 우리나라의 2분의 1에 불과함.
- 자료도 전체 도서관에 총 4천 9백만 책이 소장되어 있어 국민 1인당 1.01권 수준임.
국민 1인당 자료수도 덴마크의 5분의 1, 미국과 일본의 3분의 1, 영국의 2분의 1로 매우 열악한 수준임.

※ OECD 주요가입국 공공도서관 현황

국명(기준년도)	공공도서관수(개관)	1관당 인구수(명)	장서수(책)	1인당 장서수(책)
한국(2006)	564	86,865	49,242,282	1.01
미국(2004)	9,211	41,253	871,889,000	3.00
영국(2004)	4,624	12,911	110,111,000	1.85
일본(2004)	2,825	44,845	333,962,000	2.72
프랑스(2003)	4,186	14,501	152,159,231	2.51
스페인(2002)	497	28,040	44,852,081	1.12
핀란드(2002)	431	11,998	37,459,800	7.24
덴마크(2002)	229	23,516	26,800,701	4.98
독일(2002)	8,662	9,497	101,393,029	1.23
터키(2002)	1,464	46,236	12,766,932	0.19

[출처: e-나라지표, <http://index.go.kr>]

- 공립공공도서관의 경우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2006년말 기준 544관 중 58.3%(317관)와 41.7%(227관)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다만 1990년 이후 공공도서관 이후 공공도서관은 거의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로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개관은 사립공공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하여, 1관당 평균 11명으로 직원 1인당 2만 8천 명의 이용자를 담당하고 있음.
※ 국제도서관협회연맹 기준: 인구 2,500명당 상근직원 1명
- 공공도서관 1관당 예산은 평균 7억4천여 만원이며, 이중 자료구입에 사용되는 예산은 10.6%에 그치고 있음.
- 도서관에는 다양한 서비스 공간과 함께 일반열람실이 있어 도서관이 개인들의 공부방 역할에 치중하고 있음.
- 새로운 「도서관법」에서는 문고,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등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도서관(이하 '특수공공도서관'이라 칭함)이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음.

□ 분석

- 공공도서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국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시설, 인력, 장서, 예산 등 전반적인 요인에서 열악한 환경으로 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한 채 시험이나 학습준비를 위한 공부방에 그치고 있음. 최근에는 평생학습 진흥을 명목으로 도서관 본래의 기능인 지식과 정보제공보다는 각종 강좌 중심의 문화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도서관 운영도 여전히 적지 않은 도서관이 전문가(사서)가 아닌 일반 행정가가 맡고 있으며, 도서관 조직도 대국민 서비스보다는 관리, 문화활동 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음.
법에 의하면 공립공공도서관은 사서직으로 관장을 보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도서관을 도서관이 아닌 기관(평생학습과 등)으로 명칭을 바꾸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도서관의 절대적 부족과 운영능력의 부실로 인해 도서관간 협력체제 구축이 미흡함.
특히 운영주체가 다름으로 인하여 협력이 잘 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폭넓고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정부의 민간 위탁 확대 방침에 따라 민간 위탁 도서관 수 증가추세임.
민간위탁 도서관 대부분은 신규 도서관으로, 이는 공무원 총정원제로 인해 새롭게 요구되는

신규 사서직원의 정원확보가 어려워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택하고 있기 때문임. 민간 위탁으로 인해 도서관의 공공성과 안정적 운영기반이 부실화 되고 있음.

- 공공도서관은 지역내 모든 계층의 주민들에게 고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특수계층(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은 미흡한 편임.
- ‘특수공공도서관’에 대한 정부나 사회의 관심이 적어 이 분야 도서관에 대한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 ‘특수공공도서관’은 소외계층이나 특별한 환경에 처해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이므로 보다 전문적인 자료나 인력 및 협력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나 크게 미흡한 상황이며, 지역내 공공도서관 활동과도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개선방안

- 공공도서관 확충과 지원 확대
- 공공도서관 운영주체 일원화(지방자치단체로의 일원화)
- 도서관 운영방식의 전면적 개선
- 전문가(사서직)에 의한 도서관 운영체제 확립 및 전문지원확충
- 공부방 기능 폐지와 문화활동 축소를 통한 지식·정보제공 기능 확립
- 명칭변경이나 민간위탁 방지책 마련
- ‘특수공공도서관’에서도 일반국민들과 같은 수준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서관영역에서의 차별 방지책 요구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특수공공도서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제와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노력이 강구

대학도서관

현황

- 2006년말 현재 518개 관임.
- 대학도서관은 대학교육 활동의 핵심적 시설로서 학술연구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장서의 질적 수준이 매우 중요함. 1관당 평균 21만여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한 해외학술정보의 입수는 크게 부족한 편임.

※ 연간발행되는 해외학술지 25만종

국내 대학도서관이 구독하는 해외학술지 종수 1만 5천종(약 6%)
미국 연구도서관협회 회원도서관 평균 구독종수 1만 5천 3백종
(하버드 대학도서관 약 11만종, 버클리 대학 도서관 약 7만 9천종)

○ 전문인력은 2006년말 현재 1관당 5.1명의 사서직원이 배치되어 있음.

□ 분석

- 대학도서관도 대체로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제공보다는 취업이나 시험 준비를 위한 공부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도서관의 중요성에 비추어 대학내 도서관의 위상은 크게 높지 못함. 도서관장도 대부분 교수의 순환보직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내 의사결정에도 깊이 관여하지 못하고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이 산발적이고 중복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대학도서관 체계적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대학도서관 나아가 전문도서관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이 부족함.

□ 개선 방안

- 대학내에서의 도서관 위상강화. 이를 위해 도서관을 직접 관장하는 학술부총.학장 제도 도입 필요. 또한 관장의 경우에도 교수가 아닌 도서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내부 전문가 활용 또는 외부전문가 영입 등)되어야 함.
- 대학도서관에 대한 투자 확대. 이를 제도화 하기 위해서는 대학평가시 도서관 부문의 비중을 높이도록 함.
- 장서의 확충과 전문직원이 확보되어야 함.
- 정부 각 부처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 또는 지원창구 일원화가 필요함.
- 도서관간 협력체제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정비가 급선무임.
- 대학도서관 사서의 자질 향상을 위한 재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학교도서관

□ 현황

- 초·중·고등학교에는 의무적으로 학교도서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6년 4월 현재 설치율은 90.0%임. 그러나 이러한 도서관들도 교실 1~2칸을 활용한 도서관실이 대부분임.
 - ※ 미국 96%, 영국 98%, 일본 99%(2002년)
- 학교도서관 장서는 1관당 평균 장서수는 7천 5백여권, 학생 1인당 장서수는 9.5권임. 다양한 학습활동에 필요한 CD-ROM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도 크게 부족함.
 - ※ 전체도서중 40%가 한글맞춤법개정안 시행(1989년) 이전에 발간된 도서
 - ※ 미국 초등학교 88.1권, 고등학교 150.4권/1인당 장서수
 - ※ 일본 초등학교 20권, 고등학교 26.8권/1인당 장서수
- 학교도서관 인력: 사서교사
법에 의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학교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1만 여개 학교도서관에 총 424명(3.8%, 2006년 기준)으로 1관당 0.042명임.
 - ※ 미국 1관당 1.8명(1994)/ 일본 1관당 2.2명(1999)
- 학교도서관 예산은 1관당 689만원, 학생 1인당 6천원 정도 뿐임.
-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일부 지역교육청(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제주도 등), 시민단체 등이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위해 도서관설치와 사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분석

- 학교도서관의 시설이나 장서, 인력, 예산 등 모든 부문에서 크게 부족함.
- 특히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할 전문가인 사서교사의 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도서관 운영이 크게 부실한 상태임.
- 최근 일부 지역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 설치 및 사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체로 일용직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사서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기 어렵고 운영에 있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없음. 또한 직업적 안정성이 없어 유능한 사서교사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음.

□ 개선 방안

- 학교도서관이 점차적으로 확대·설치되어야 함.
- 교수·학습 지원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서 확충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함.
- 사서교사의 배치 확대가 필수적임.
- 지역교육청 내 전담조직 설치 또는 담당장학사 배치를 통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추진이 필요함.
- 학교도서관과 지역내 공공도서관간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 학교도서관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전문도서관(정보센터)

□ 현황

- 전문도서관은 해당소속기관의 직원 또는 일반인들에게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열람실 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전문자료 3천권 이상 확보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 대부분 모체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 공공부문에서의 전문도서관은 정부산하 기관이나 연구소 등에 설치된 도서관(정보센터)들이 중심이 되고 있음.
이 도서관들은 선진 여러나라의 제국의 지식정보 식민지화나 지식정보의 예측화를 지양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지식정보인프라 구축 및 국내 고유의 지식정보 콘텐츠의 생산과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 학술정보 유통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분석

- 우리나라는 선진 여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행정부처별 이기주의의 소산으로 국가 예산이 지원된 국가 연구개발 사업들을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20개 행정부처 산하의 63개 연구개발 과제 관리기관에서 분산하여 관리하고 있음(표 참조). 그러나 이러한 분산된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의 중복투자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임.

〈표〉 행정부처별 연구개발 과제 관리기관 현황

행정부처명	연구개발 과제 관리기관명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단
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원자력), 원자력병원, 과학기술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신기술창업지원단, 원자력연구소, 포항공대,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학술정보원,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학술진흥재단
국무조정실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국방부	기술부, 민군겸용기술센터
기상청	기상청, 기상연구소
노동부	기술교육대학
농림부	농림부,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농업기반공사, 수의과학검역원, 농림기술관리센터
농업진흥청	농업진흥청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림청	산림청, 임업연구원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요업기술원, 산업기술대학, 경기공업대학, 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연구소, 자동차 부품연구원, 산업디자인진흥원, 산업기술표준원, 에너지 관리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사업기술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정보통신연구기구진흥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철도청	철도청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방재연구소
환경부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로 생산되는 국가고유의 R & D 지식정보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수집·분석·가공한 후 서비스할 수 있는 주관 기관과 관련 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미국의 경우 NTIS(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는 미국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수행한 각종연구보고서를 수집하여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고 있음. 이 데이터베이스는 NASA, DOD, DOE, HUD, EPA 등 300여 정부기관에서 분석한 자료 및 각종 연구개발, 기술보고서들을 수록하고 있음. 여기에는 기계가독형 데이터파일, 소프

트웨어, 미국정부 발명품, 외국 정부의 연구보고서 등도 포함됨. 또한 Government Reports Announcements & Index 등의 출판물 내용도 수록함. NTIS는 환경, 에너지 보존, 기술이전, 사회문제, 도시와 지역개발 및 계획 등의 관심 높은 주제분야는 물론 기타 광범위한 주제분야를 다루고 있음. NTIS 소장 정보자원의 약 75% 정도가 연구보고서이며, 이외에도 번역물, 서지자료, 특허, 회의자료, 정기간행물 기사 등이 수록되어 있음.

- 국가차원의 학술정보센터로 1962년 출범한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는 그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업무이관이나 기구통합 등으로 기관명 및 소속행정부처가 계속적으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정보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웠음.

국가차원의 지식정보서비스기관들은 정부차원에서의 특별한 관심과 법적, 행정적 조치가 수반되어야만 기관 차원에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최근까지도 이러한 기반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

※ 반면에 선진 여러나라의 과학기술정보센터들은 40~50년이 경과한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그 명칭과 소속 행정부처를 달리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진행하면서 발전해 오고 있음.

□ 개선 방안

- 국가차원의 정보센터는 20개 행정부처 산하 63개 연구개발과제 관리기관에 의해 각각 관리되고 있는 지식정보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야함.

- 과제 관리 기관별로 접수되는 연구계획서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제출되는 연구보고서 또는 기술보고서에 이르기까지 망라적으로 국가 고유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야함.
국내연구개발자는 물론이고 해외정보서비스 기관에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해외 선진 학술정보서비스 기관과 상호 대등하게 지식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함.

- 정부는 가장 양호한 인프라를 지니고 있는 국가차원의 정보센터를 지정하고, 이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부처별로 각기 운영중인 연구개발과제 관리기관과 주요 연구개발 수행기관에 동일한 '연구보고서 자동수집 시스템'을 적용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구축해야 함.

분야별 전문정보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개별연구실 또는 공장차원에서 유통중인 지식정보까지도 수집하여 관리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이러한 국가차원의 정보 센터는 각 부처별, 각 기관별로 구축되고 있는 학문분야별 인력데이터베이스나 연구기자재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활용하거나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함. 즉 이 기관은 이를 통해 국가차원의 인력활용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고가의 연구기자재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은 우선적으로 전문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 이들 도서관들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함. 이를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제도 등을 활용.
- 민간부문 전문도서관 설립·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함.

국립중앙도서관

□ 현황

-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 18조와 제 19조에 의해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설치되어 운영 중임.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도서관법 제 19조)
 - ①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② 국내의 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③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④ 정보화를 통한 국가 문헌정보체계 구축 ⑤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도서관에 대한 지도 및 협력 ⑥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⑦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⑧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
- 관장은 1급 공무원이며, 도서관조직은 2부(기획연수부, 자료관리부), 6과(총무과, 도서관운영협력과, 사서능력발전과, 자료기획과, 주제정보과, 정책자료과), 1담당관(정보화담당관), 1팀(작은도서관진흥팀), 1기획단(디지털도서관준비기획단), 1연구소(도서관연구소), 1센터(장애인지원센터)로 되어 있음.
- 도서관은 본관(본관, 서고동, 연수동으로 구성)과 분관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있으며, 향후에는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으로 3관 체제로 운영할 계획임. 국립디지털도서관은 2008년 말 완공예정임.
- 현재에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과 함께 업무의 많은 부분을 대국민 열람봉사에 치중하고 있음.

□ 분석

-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직원, 소장자료, 예산규모 등이 전체적으로 부족함.

• 한국(2006)	직원	302명,	소장자료	534만여책,	예산 약	501억원
• 미국(2006)	직원	3,800여명,	소장자료	13,400만여책,	예산 약	6,003억원
• 영국(2006)	직원	2,300여명,	소장자료	10,200만여책,	예산 약	2,900억원
• 일본(2005)	직원	930여명,	소장자료	3,600만여책,	예산 약	2,300억원
• 중국(2000)	직원	1,387명,	소장자료	2,135만여책,	예산 약	180억원
• 싱가포르(1999)	직원	750명,	소장자료	547만여책,	예산 약	1,700억원

-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임에도 관장의 직급이 낮고, 도서관 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으로 보임되어 왔음. 또한 관장의 재임기간도 매우 짧아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도서관 발전을 이끌어 가는데 한계가 있었음.
- 열람봉사에 많은 자원을 쓰고 있어 오히려 국가대표도서관의 기본기능 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음.

□ 개선 방안

- 21세기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전체 도서관을 대표하고 도서관관련 조사·연구, 자료개발, 지도·협력, 정책개발 기능 등을 수행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도서관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자료와 서비스를 개발하여 전국 모든 도서관에 보급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확대 및 업무 개편이 필요함.
- 대표도서관의 위상에 걸맞는 시설, 인력, 자료 및 예산 확보, 특히 관장의 직급 상향 조정 및 도서관 전문가 배치가 필요하며, 각 지역에 분관 설치 운영 필요
-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분관), 국립디지털도서관(완공 예정)의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 필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회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타 주요도서관 및 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종합적인 도서관 서비스 체제의 구축이 요구됨.
- 현재에는 공공, 대학, 학교도서관 등 많은 도서관이 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열람봉사 기능을 축소하여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함.
- 시설확충(지역분관 설치 등), 전문직원 확보 및 예산증액이 요구됨.
- 관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도서관 전문가로 배치되어야 함.

▶ 참고 자료

도서관정책 수행기관 개요

I.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가기관]

1. 설립목적

-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도서관 진흥을 위한 정책 마련
- 부처별 관종별로 추진된 도서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여, 협의와 조정에 기반한 균형잡힌 도서관 정책추진 기반 조성
- 도서관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도서관 비전 제시
- 도서관 발전의 중장기 비전에 기초한 총괄적 지식정보자원 관리 및 서비스 방안 마련

2. 위원회의 역할

-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 도서관 관련 법·제도의 개선
-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정립
-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시스템 구축
- 도서관 및 자료의 접근·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개선
- 도서관 전문인력의 양성

3. 위원회의 성과

- 도서관 인프라 개선 및 법·제도 정비 추진
 - 도서관 시설·자료·인력 등 도서관 인프라의 점진적 개선
 - 도서관진흥을 위한 도서관법 전면 개정과 대통령 소속하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한 도서관 정책기반 강화
- 도서관 정보화 추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
 - 디지털콘텐츠의 지속적인 확충과 활용 증가, 정보시스템의 개선 등 도서관 정보서비스

고도화 추진

-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도서관 정보서비스 제공

- 도서관 협력체계 활성화 추진
 - 도서관 유형에 따라 소장자료 종합목록·원문정보 서비스 등 도서관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향후 자생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각 협력체간의 통합연계를 통하여 범국가 단위의 통합협력체로 발전 필요
 - 민관 파트너십 구축 확산으로 도서관 지원기반 확대

4. 위원회 향후 정책과제

- 도서관서비스 선진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도서관 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환경 개선
 -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

- 국가 도서관·정보 인프라의 고도화로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
 - 국가 도서관정책 추진 활성화 지원
 - 도서관활성화 전기 마련을 위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 도서관관련 법·제도 개선으로 도서관 선진화
 - 도서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도서관 평가제도 개선 및 도서관 통계시스템 구축

- 유비쿼터스 환경에 따른 미래형 도서관 구현
 - U-Library 구현으로 국가 지식정보의 공유·확산
 - 국내외 도서관간 협력체계 구축 기반 조성
 - 도서관 협력기반 강화로 글로벌 도서관정보서비스 구현
 - 남북한 도서관간 상호교류 및 협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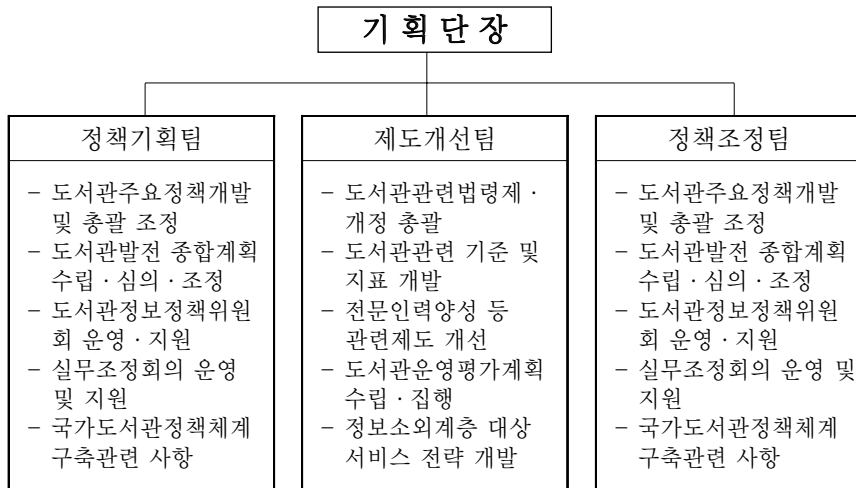
5. 위원회 구성 현황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근거 : 「도서관법」 제12조, 제13조
 - 주요기능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등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
 - 구성 : 26명(위원장 포함)

- 위 원 장 : 대통령 위촉
- 부위원장 : 문화관광부장관(당연직)
- 위 원 : 위촉직 13명, 당연직 13명(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등)
- 임 기: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 근 거 : 「도서관법」 제12조 제3항, 제5항
- 주요기능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실행기구
- 구 성 : 1기획단장, 3팀, 총25명
(국회도서관, 교육부 파견근무자 포함)
- 주요업무



II 한국도서관협회[민간단체]

1. 설립목적

- 도서관의 관리운영 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및 그 실시촉진, 도서관과 독서에 관한 자료의 편간, 도서관 직원의 교육 및 지위의 향상, 도서관의 보급 및 설립 운영지도, 서지 사업 및 양서의 선정 보급, 독서운동의 추진 및 지도, 도서관 용품의 규격화 및 그 보급, 도서관 관계 자료실의 설치, 각국 도서관 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연락 제휴,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계획·실행

- 도서관에 관련된 각종제도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부부처 및 현장의 각급 도서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및 국제대회 등의 유치·개최를 통하여 우리나라 도서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전문직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세미나 등 교육활동 수행

2. 협회의 역할

- 「도서관법」 제 17조 규정에 의거하여, 도서관 상호간의 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 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도서관 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 향상과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자 1945년에 설립된 도서관 연합체
- 「도서관법」제 46조 의거하여 사서직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에게 사서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3. 협회의 사업

- 권익협력사업
- 교육연수 조사연구 사업
- 도서관 및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 자료발행사업
- 국제교류사업
- 조직운영사업 등

4. 향후 협회 정책과제

- 주요 사업활동의 적실성 확보와 강화
 - 대정부 견제기능 및 정책제안 강화
 - 정부기관과의 사업협력강화
 - 조사연구프로젝트의 기획과 추진
 - 도서관·독서문화 사업의 확대
 - 사서자격제도의 전향적 개선
- 국제교류 및 협력활동의 활성화
 - 국제도서관계와의 교류·협력 강화
 - 북한도서관계와의 교류·지원 사업 추진

- 전문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대성 강화
 - 도서관 전문단체와의 연대강화
 - 문화 연대 등 관련 시민단체와의 관계 개선

5. 협회 구성현황

- 회원현황

총회원수	단체회원						개인회원		
	공공	대학	학교	전문	국립	계	일반	평생	계
2,301	456	290	51	205	1	1,003	646	652	1,298

(2007년 12월 31일 현재)

- 사서자격증 발급현황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계
1,411	36,408	25,824	63,643

(2007년 12월 31일 현재)

- 조직 : 회장(1), 부회장(1), 이사(21), 감사(2), 평의원(80), 사무국(13), 12개 전문위원회, 8개 관중별 협의회, 3개 지구협의회